



4면

한승헌 도서관 개관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음 9월 23일) 제385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예산, 전북 성공 완성의 마중물

도, 본예산 10조9770억 편성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전북도 본예산안 10조9,770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2,492억원) 증가한 규모로, 민생 안정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예산이다.

김 지사는 "이번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첫 번째 실질적 예산"이라며 "AI·민생복지·균형발전 시대에 맞춰 지방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 속에서 전북이 국가정책 전환의 선도지역이 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예산안을 '전북 성공 완성의 마중물'이라고 규정하며 △민생 안정 △미래산업 구체화 △농생명산업 혁신 △체류형 관광 강화 △주거·돌봄 확충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의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을 신설한다.

또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7,000억원대로 확대하고, 신종년 일자리와 혁신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 미래성장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이차전지 산업을 위해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새만금에는 수전해 기술 국산화 실증부지를 조성한다.

바이오산업 예산은 140억원으로 늘리고, 전북형 피지컬 AI 펀드(250억)를 조성해 신산업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핀테크 지원센터 전북분원 설립으로 금융특화도시 전라포 본격 추진한다.

시·군 특성에 맞춘 농생명산업지구를 육성하고, 디딤돌 스마트팜, 청년 원스톱 콜센터 등 청년농 정착 시스템을 강화한다.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김제 용지 정착농민 잔여축사를 매입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동시에 개선한다.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아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전년대비 2.3% 증액... 민생 안정·미래산업 구체화 등 5대 방향 제시
김관영 도지사 "국민주권정부 재정기조 변화 대응하는 첫 실질적 예산"

간·치유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또 도심 랜드마크 사업인 대표도서관·서예비엔날레관·문학예술인회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북형 청년 한 달 살이,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등 생활문화 사업도 병행한다.

전북형 반할주택 300호를 새로 공급하고, 전국 최초로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가 구입비' 지원을 시행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확충, 어르신 일자리 3,000개 확대, 의료·돌봄 통합지원 예산도 대폭 늘려 노후 안전망을 강화한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정부 승인 대응 예산도 편성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위대한 도전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 승인 절차 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했다"며 "왜 전주인가를 입증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교부세 감소와 세수 부진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의 채무비율만 2024년 말 기준 8.3%로, 전국 평균 약 14.8%보다 크게 낮다.

김관영 도지사는 효율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도민 체감형 사업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재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 여력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우리는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도전해 왔고, 그 결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특별자치

도 출범,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신청도시 선정 등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전날 고창에서 삼삼전자의 전북 첫 투자자 스마트허브 물류센터가 착공된 점도 언급하며 "도전은 전북의 상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 속에서 전북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모델이 되겠다"며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전환하는 등 예산의 효율화를 통한 도민 밀착 친화형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평가다. /이만호 기자

"9월 부동산 통계 법적 근거 명확하게 설명 가능"

김윤덕 국토부장관, 국회 예결위서 야당 의원 지적에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개혁신



당 등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김 장관에 따르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의혹 제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는 것.

이어 그는 "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회위원회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인가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희정 기자

전북소방, 수능 대비 수험생 안전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19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에는 도내 66개 시험장(688개 시험실)에서 총 1만7,935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며, 소방본부는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대비활동을 강화했다.

먼저, 시험장별로 소방안전관리관 67명을 배치해 시험 전후로 화재예방과 응급상황 대응에 나선다.

입실 시간대에는 수험생 등고 안전을 지원하고, 시험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을 실시

한다.

또한 소화기·소화전·비상구 등 주요 소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기 평가 시간에는 소방차 사이렌을 자제해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험생 등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119구급차 긴급출동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시험장 내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한다.

소방본부는 신속한 상황공유를 위해 시험장별 소방안전관리관 전용 핫라인 단체톡방을 개설·운영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한 줄 소식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추진... 공직자 내란 관여 여부 조사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고창군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의회
고창군의회

